이슈페이퍼
2020-17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코로나 피해실태 및 정부 대응 평가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0. 11. 10.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0 전송: 02-2635-1134 이메일: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 1

1. 서론 ····· 6

2. 코로나19 전후 작은사업장 노동자 생활실태 변화 ····· 7

3. 작은사업장 노동자 사회보장 및 노동조건 적용 실태 ····· 22

4.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 30

5.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생각하는 코로나19 극복 대안 ····· 46

6. 요약 및 시사점 ····· 51

요약

□ 코로나19 전후 '30인 미만 작은사업장'(이하 작은사업장) 노동자 생활실태 변화,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사회보장 및 노동조건 적용 실태,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생각하는 코로나19 극복 대안 등에 대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코로나19 전후 작은사업장 노동자 생활실태 변화

- 최근 8개월(2020.2~9월) 사이에, 작은사업장 노동자 약 8명 중 1명꼴(13.4%)로 직장 내 '코로나 실직'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약 2명(18.4%)은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 대비 임금이 삭감됨
- 코로나19를 전후로 임금감소를 경험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월평균 감소액은 거의 40만 원에 육박하는 39만 4천 원(19.0%)
- 최근 8개월(2020.2~9월) 사이에,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2~3명(25.5%)은 직장 내 일시휴직을 경험
-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무급휴직·휴업을 경험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대략 6명 중 1명꼴(16.1%)
-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과 비교해 직장 내 업무강도가 높아진 경험을 한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대략 6명 중 1명꼴(17.1%)
-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과 비교해,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변화가 없었다'(75.0%), '줄었다'(15.9%), '늘었다'(9.1%)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20년 1월 이후, 작은사업장 노동자 5명 중 1명(19.2%)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임금이 불이익하게 변경됨
- 최근 8개월(2020.2~9월) 사이에 코로나19와 연관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5명 중 1명꼴(19.3%)

ㅇ 코로나 이후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연차휴가 일수(2020년)는 코로나 발생 전(2019년) 연차휴가 일수보다 40%가량(4.9일) 큰 폭으로 줄어듦

□ 작은사업장 노동자 사회보장 및 노동조건 적용 실태

ㅇ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4대 직장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89.3%로 가장 높고, 건강보험(86.0%), 국민연금(85.2%), 산재보험(82.0%) 순서로 나타남

ㅇ 작은사업장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장(17.8%)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31.5%) 등 취약 집단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코로나19 이후 지난 8개월(2~9월) 사이에 작은사업장 실직 경험자 10명 중 약 7명(67.9%)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음

ㅇ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41.5%)이 가장 높음

ㅇ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약 2명(21.2%)은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음

ㅇ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약 8명(77.2%)은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지 없음

ㅇ 유급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6명 중 1명꼴(16.8%)에 불과함

□ 작은사업장 노동자 코로나19 대응 평가

ㅇ 정부 대응 기조 평가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7명(70.0%)은 코로나19 대응을 '단기적 임시처방 중심'으로 평가
-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55.5%)은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노동자 지원과 기업 지원 사이에서 균형적이지 않다고 평가
-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재직자 고용유지 중심'이라고 평가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침(48.5%)

○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 평가

-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대해,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약 7~8명(72.9~83.5%)은 해당 대책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대해,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대략 3~8명(3.5~8.3%)만이 실제 혜택을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8명(8.3%)만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7명(7.3%)만이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3~4명(3.6%)만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4명(4.0%)만이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혜택을 경험

○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 평가

-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7~8명 이상(69.8~86.0%)은 해당 대책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대략 4~6명(4.1~6.4%)만이 혜택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6명(6.4%)만이 ‘무급휴직자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5명(4.7%)만이 ‘가족돌봄휴가 지원’ 혜택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3명(3.4%)만이 ‘저소득층·특고 구직촉진수당’ 혜택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생각하는 코로나19 극복 대안

- ㅇ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약 4명(37.5%)은 회사폐업·장기무급휴업(27.2%), 해고(10.3%) 등 고용불안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ㅇ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42.3%)은 해고 억제와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과 특례기간·지원기간 연장을 우선순위로 생각
- ㅇ 작은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대안으로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못 받는 모든 취업자에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재난실업수당 지급'을 우선순위로 생각
-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람직한 노동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28.9%)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24.6%)을 우선순위로 생각

□ 시사점

- ㅇ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대책에서는 계속해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 ㅇ 현장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부 대응 기조와 세부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대다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평가했듯이 정부는 '단기적 임시처방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제도 개선과 신속한 구조적 개혁 대안 마련 필요
  - 절반 이상(55.5%)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부 대응을 노동자와 기업 지원 사이에 균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기업지원' 중심 대응에서 시급히 벗어나 '재직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소득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지난 8월 말~9월 초 기준, 기업지원 실적(48조 7,429억 원)은 재직자 고용유지 대

책(1조 3,900억 원)의 35배, 주요 실직·소득감소 지원대책(2조 1,703억 원)의 22배에 달함

- 특히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약 4명이 '고용불안'을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응답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사후적인 실업자 지원보다 재직자 고용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 관련 대책을 획기적 확대·강화해야 함
-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으로는 작은사업장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가 시사하듯이, 노동자 직접신청 제도 도입·원청 지원금 신청 시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 의무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과 특례조치기간·지원기간 연장 등 임시조치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자금지원-고용유지의무 연계 정책을 확대·강화해야 함
- 현행 대표적인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미가입 요건, 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못 받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실업수당' 도입이 절실함
- '긴급 재난실업수당'은 가장 많은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최우선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으로 꼽은 제도임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대략 7~8명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코로나19 대책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실제 적용을 위한 첫 발로써 노동조합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장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o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꼽은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대로 된 실업부조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특고 등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한국 사회 구조 개혁 과제임

1. 서론

□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전후로 30인 미만 작은사업장(이하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등 생활상 변화와 다양한 코로나 정부 대책의 현장 적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임[1)]

[표-1] 응답자 특성

구분		설문 참가자(명)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303	30.3
	5-29인	697	69.7
	5-9인	359	35.9
	10-29인	338	33.8
고용형태	정규직	838	83.8
	비정규직·임시일용직	162	16.2
직무	관리자	110	11.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1	5.1
	사무 종사자	520	52.0
	서비스 종사자	200	20.0
	판매 종사자	36	3.6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32	3.2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20	2.0
	단순노무 종사자	31	3.1
업종	제조업	177	17.7
	도소매업	86	8.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79	7.9
	건설업	81	8.1
	교육 서비스업	61	6.1
	숙박 및 음식점업	142	14.2
	운수 및 창고업	113	11.3
	금융 및 보험업	14	1.4
	기타 업종	247	24.7
노동조합 유무	노동조합 없음	942	94.2
	노동조합 있지만 조합원 아님	38	3.8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원	20	2.0
성별	남성	432	43.2
	여성	568	56.8
연령	20대	229	22.9
	30~40대	648	64.8
	50대 이상	123	12.3
전체		**1000**	**100.0**

1) 본문에서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동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의미함

ㅇ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7일에서 16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ㅇ 작은사업장이 분포된 업종별 비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 3.1%p임

ㅇ 조사내용은 △ 코로나19 전후 작은사업장 노동자 생활실태 변화 △ 작은사업장 노동자 사회보장 및 노동조건 적용 실태 △ 작은사업장 노동자 코로나19 대응 평가 △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생각하는 코로나19 극복대안 등임

2. 코로나19 전후 작은사업장 노동자 생활실태 변화

1)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경험

□ 최근 8개월(2020.2~9월) 사이에, 작은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겪은 경험은 민주노총의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보다 '임금삭감(반납)', '연장근무',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 등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생활 실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음을 시사

* 민주노총이 지난 4월 2일 ~ 8일 사이에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0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ㅇ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경험 비율이 높은 다섯 가지 항목은 '코로나19와 연관된 연차휴가 사용'(19.3%), '재택근무'(18.8%), '업무량 증가 또는 노동강도 강화'(18.0%), '무급휴직·휴업'(16.1%), '잔업·특근 등 연장근무'(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4월 조사보다 10월 조사에서 직장 내 경험 비율이 늘어난 항목은 '임금삭감(반납)'(4.5%p)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장근무'(3.1%p), '연차휴가 소진'(2.0%p), '권고사직'(1.1%p), '(정리)해고'(1.0%p), , '무급휴직·휴업'(0.4%p)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2] 작은사업장 노동자 직장 내 경험 비율 변화(단위: %, %p)

항목	4월 조사(A)	10월 조사(B)	격차(B-A)
재택근무	18.9	18.8	-0.1
연차휴가소진	17.3	19.3	2.0
무급휴직·휴업	15.7	16.1	0.4
연장근무	12.9	16.0	3.1
임금삭감(반납)	8.1	12.6	4.5
권고사직	7.1	8.2	1.1
(정리)해고	6.8	7.8	1.0
회사폐업	2.4	1.8	-0.6

2) 직장 내 '코로나 실직' 경험

□ 최근 8개월(2020.2~9월) 사이에, 작은사업장 노동자 약 8명 중 1명꼴(13.4%)로 직장 내 '코로나 실직' 경험

[표-3] 작은사업장 노동자 '코로나 실직' 경험 실태(단위:%)

구분		실직경험 노동자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13.2
	5-29인	13.5
고용형태	정규직	12.2
	비정규직·임시일용직	19.8
상위 2대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22.5
	교육서비스업	21.3
상위 2대 직무	판매 종사자	22.2
	서비스 종사자	19.5
성별	남성	12.5
	여성	14.1
연령	20대	14.0
	30~40대	12.8
	50대 이상	15.4
전체		**13.4**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13.2%)와 5~29인 사업장(13.5%) 간 비율은 거의 비슷
- 비정규직·임시일용직(19.8%)이 정규직(12.2%)보다 약 1.6배 높게 나타남

- 직장 내 '코로나 실직' 경험 비율이 높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22.5%), 교육서비스업(21.3%) 등이며, 직무의 경우 판매 종사자(22.2%), 서비스 종사자(19.5%) 등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간 '코로나 실직' 경험 비율은 각각 17.4%, 18.1%로 여성이 미세하게(0.7%p) 높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작은사업장에서 직장 내 '코로나 실직' 경험은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 여성과 50대 이상 고령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자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 '코로나 실직' 경험과 관련하여,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전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직장갑질119 제3차 설문조사(2020.9.)와 작은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설문조사(2020.10.)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발견됨

[표-4] 직장갑질119 3차 조사(9월) 민주노총 조사(10월) 실직경험 비교(단위: %, %p)

구분		실직경험 비율			격차(B-A)
		직장갑질119(A)	민주노총(B)		
사업장 규모	(민간) 30인 미만	20.3	13.4		-6.9
	(민간) 30인 이상	10.0			
고용형태	정규직	4.3	12.2		7.9
	비정규직·임시일용직	31.3	19.8		-11.5
상위 2대 업종	숙박·음식점업	27.5	숙박·음식점업	22.5	-5.0
	교육서비스업	23.0	교육서비스업	21.3	-1.7
전체		15.1	13.4		

자료 : 직장갑질119가 시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 조사(3차)」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작성.

- 고용형태에 따른 실직 경험 비율이 정규직의 경우 작은사업장 대상 민주노총 조사에서 7.9%p 높고, 반면 비정규직·임시일용직은 오히려 11.5%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도 상당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시사
-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이 높은 상위 2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으로 두 조사가 동일한데, 이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이 위 2개 업종에 집중되었음을 시사

3) 임금감소 경험

□ 작은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 10명 중 약 2명(18.4%)은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 대비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5] 작은사업장 노동자 코로나 전후 임금감소 경험 실태(단위: %)

구분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21.1%
	5-29인	17.2%
고용형태	정규직	17.5%
	비정규직·임시일용직	22.8%
상위 2대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31.7%
	교육서비스업	26.2%
상위 2대 직무	판매 종사자	33.3%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30.0%
성별	남성	19.2%
	여성	17.8%
연령	20대	20.1%
	30~40대	17.4%
	50대 이상	20.3%
전체		**18.4%**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21.1%)가 5~29인 사업장(17.2%)보다 약 1.2배 높게 나타남
- 비정규직·임시일용직(22.8%)이 정규직(17.5%)보다 약 1.3배(5.3%p)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전후 임금감소 경험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1.7%), 교육서비스업(26.2%) 등이며, 직무의 경우 판매 종사자(33.3%),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30.0%) 등임
- 남성과 여성 간 '임금감소' 경험 비율은 각각 19.2%, 17.8%로 남성이 미세하게(1.4%p) 높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작은사업장에서 코로나19 전후로 임금감소를 경험한 노동자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판매종사자 및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50대 이상 고령노동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 코로나19 전후, 임금감소 폭

□ 코로나19를 전후로 임금감소를 경험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월평균 감소액은 거의 40만 원에 육박하는 39만 4천 원(19.0%)으로 나타남

*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7~9월 평균임금은 약 240만 원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감소 폭(19.7%)이 5~29인 사업장 노동자(18.7%)보다 미세하게(1.0%p) 높게 나타남
- 비정규직·임시일용직(18.7%)과 정규직(19.1%) 간 임금감소 폭은 큰 차이가 없었음
- 코로나19 전후 임금감소 폭이 큰 업종은 건설업(28.6%), 운수 및 창고업(22.9%) 등이며, 직무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3.8%),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21.4%), 단순노무종사자(21.1%) 등으로 나타남
- 성별로 '임금감소' 폭은 남성(20.5%)이 여성(17.8%)보다 2.7%p 크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6] 작은사업장 노동자 코로나 전후 임금감소 폭(단위: %, 원)

구분		평균 임금*	임금감소 비율	임금 감소액
사업장 규모	1-4인	218.56만	19.7	43.06만
	5-29인	250.22만	18.7	46.79만
고용형태	정규직	251.72만	19.1	48.08만
	비정규직·임시일용직	180.94만	18.7	33.84만
상위 2대 업종**	건설업	269.74만	28.6	77.15만
	운수 및 창고업	249.92만	22.9	57.23만
상위 2대 직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63.96만	23.8	62.82만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52.09만	21.4	53.95만
성별	남성	285.37만	20.5	58.50만
	여성	205.94만	17.8	36.66만
연령	20대	192.65만	17.9	34.48만
	30~40대	253.29만	17.9	45.34만
	50대 이상	268.51만	25.9	69.54만
전체		**240.26만**	**19.0**	**39.40만**

* 2020.7~9월 평균 임금

**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의 임금 감소비율이 30.0%로 가장 높지만, 사례수가 적어 순위에서 배제함

□ 작은사업장에서 코로나19 전후 임금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집단은 5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남성, 50대 이상 고령노동자로 나타남

5) 일시휴직 경험

□ 최근 8개월(2020.2~9월) 사이에, 작은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 10명 중 2~3명(25.5%)은 직장 내 일시휴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일시휴직은 무급휴업·휴직과 유급휴업·휴직 경험을 모두 포함

[표-7] 작은사업장 노동자 직장 내 일시휴직 경험 실태(단위:%)

구분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26.7
	5-29인	25.0
고용형태	정규직	24.5
	비정규직·임시일용직	30.9
상위 2대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43.0
	교육서비스업	34.4
상위 2대 직무	서비스 종사자	38.0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35.0
성별	남성	27.3
	여성	24.1
연령	20대	28.8
	30~40대	23.6
	50대 이상	29.3
전체		**25.5**

- 직장 내 일시휴직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이 5인 미만 사업장(26.7%)이 5~29인 사업장 노동자(25.0%)보다 1.7%p 높게 나타남
- 비정규직·임시일용직(30.9%)이 정규직(24.5%)보다 약 1.3배(6.4%p) 높게 나타남
- 직장 내 일시휴직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43.0%), 교육서비스업(34.4%)이며, 직무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38.0%),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35.0%) 순으로 나타남

ㅇ 남성(27.3%)이 여성(24.1%)보다 3.2%p 높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작은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내 일시휴직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집단은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숙박·음식점업, 서비스 종사자, 50대 이상 고령노동자 등으로 나타남

ㅇ 특히, 숙박·음식점업 노동자의 직장 내 일시휴직 경험 비율은 거의 2명 중 1명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

6) 무급휴직·휴업 경험

□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무급휴직·휴업을 경험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대략 6명 중 1명꼴(16.1%)로 나타남

[표-8] 작은사업장 노동자 직장 내 무급휴직·휴업 경험(단위:%)

구분		무급휴직·휴업	유급휴직·휴업
사업장 규모	1-4인	20.1	10.2
	5-29인	14.3	14.3
고용형태	정규직	15.0	13.0
	비정규직·임시일용직	21.6	13.6
상위 2대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38.0	12.0
	교육서비스업	23.0	19.7
상위 2대 직무	서비스 종사자	33.0	10.5
	단순노무 종사자	25.8	9.7
성별	남성	16.2	15.3
	여성	16.0	11.4
연령	20대	21.0	12.2
	30~40대	14.4	12.3
	50대 이상	16.3	18.7
전체		**16.1**	**13.1**

ㅇ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 내 무급휴직·휴업 경험 비율(20.1%)이 5~29인 사업장 (14.3%)보다 1.4배 높게 나타남

ㅇ 비정규직·임시일용직(21.6%)이 정규직(15.0%)보다 1.4배 높게 나타남

ㅇ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내 무급휴직·휴업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38.0%), 교육서비스업(23.0%)이며, 상위 2대 직무는 서비스 종사자(33.0%), 단순노무 종사자(25.8%)로 나타남

o 남성과 여성 간 직장 내 무급휴직·휴업 경험 비율은 각각 16.2%, 16.0%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내 무급휴직·휴업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집단은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숙박·음식점업, 서비스 종사자, 20대 노동자 등으로 나타남

7) 직장 내 업무강도 강화 경험

□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과 비교해 직장 내 업무강도가 높아진 경험을 한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대략 6명 중 1명꼴(17.1%)로 나타남

[표-9] 작은사업장 노동자 직장 내 업무강도 강화 경험 실태(단위:%)

구분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16.5
	5-29인	17.4
고용형태	정규직	17.4
	비정규직·임시일용직	15.4
상위 2대 업종	교육서비스업	26.2
	숙박 및 음식점업	24.6
상위 2대 직무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25.0
	서비스 종사자	24.5
성별	남성	13.9
	여성	19.5
연령	20대	20.5
	30~40대	16.8
	50대 이상	12.2
전체		**17.1**

- 5인 미만 사업장(16.5%)과 5~29인 사업장(17.4%)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 정규직(17.4%)이 비정규직·임시일용직(15.4%)보다 2.0%p 높게 나타남
- 직장 내 업무강도가 높아진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26.2%), 숙박 및 음식점업(24.6%)이며, 상위 2대 직무는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25.0%), 서비스 종사자(24.5%)로 나타남
- 여성(19.5%)이 남성(13.9%)보다 1.4배 높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작은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내 업무강도 강화를 경험한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집단은 5~29인 사업장, 정규직, 교육서비스업,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여성, 20대 노동자 등으로 나타남

□ 업무 강도가 높아진 주된 이유는 '업무량이 증가해서'가 5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원이 감축돼서'(31.0%), '직장 상사의 갑질 또는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서'(7.0%)의 순으로 나타남

8) 노동시간 변화

□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과 비교해,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변화가 없었다'가 7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줄었다'(15.9%), '늘었다'(9.1%)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전후로 노동시간 감소 경험 노동자 비율(15.9%)이 증가 경험 비율(9.1%)보다 1.7배 높게 나타남
- 작은사업장 노동자 주당 평균 총노동시간은 40.8시간이며, 이중 정상근무 시간은 39.0시간, 연장근무 시간은 1.8시간으로 나타남
- 노동시간이 줄어든 응답자의 주당 평균 감소한 노동시간은 7.4시간이며, 증가한 응답자의 주당 평균 증가한 노동시간은 2.8시간

[표-10] 작은사업장 노동자 노동시간 변화 경험 실태(단위:%)

구분		노동시간 증가 경험	노동시간 감소 경험
사업장 규모	1-4인	7.9	19.8
	5-29인	9.6	14.2
고용형태	정규직	9.3	13.7
	비정규직·임시일용직	8.0	27.2
(증가) 상위 2대 업종	교육서비스업	11.5	
	운수 및 창고업	11.5	
(증가) 상위 2대 직무	관리자	11.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8	
(감소) 상위 2대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28.2
	교육서비스업		21.3
(감소) 상위 2대 직무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30.0
	판매 종사자		27.8
성별	남성	9.0	13.2
	여성	9.2	18.0
연령	20대	10.9	18.3
	30~40대	9.3	15.6
	50대 이상	4.9	13.0
전체		**9.1**	**15.9**

□ 코로나19 전후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 변화와 관련한 특성은 아래와 같음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감소 경험 노동자 비율(15.9%)은 증가 경험 노동자 비율(9.1%)보다 1.7배 높고, 5~29인 사업장에서는 각각 14.2%, 9.6%로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작은사업장 정규직은 노동시간 감소 경험 노동자 비율(13.7%)이 증가 노동자 비율(9.3%)보다 1.5배 높고,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역시 노동시간 감소 노동자 비율(27.2%)이 증가 노동자 비율(8.0%)보다 3.4배나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노동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줄어든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8.2%), 교육 서비스업(21.3%)이며, 노동시간이 증가한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11.5%), 운수·창고업(11.5%)으로 나타남
- 직무별로 노동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줄어든 노동자 비율이 높은 상위 2대

직무는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30.0%), 판매 종사자(27.8%)이며, 노동시간이 증가한 노동자 비율이 높은 상위 2대 직무는 관리자(11.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1.8%)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노동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은 노동시간이 감소한 노동자 비율(13.2%)이 증가한 노동자 비율(9.0%)보다 1.5배 높고, 여성은 감소한 노동자 비율(18.0%)이 증가한 노동자 비율(9.2%)보다 거의 2배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노동시간 변화의 주요 특징은 20대와 30대에서 노동시간이 증가한 노동자 비율이 각각 10.9%, 10.8%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시간이 줄어든 노동자 비율도 역시 같은 연령대에서 각각 18.3%, 15.7%로 높게 나타남

□ 작은사업장에서 코로나19 전후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노동자 비율은 5~29인 사업장보다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남성보다는 여성,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코로나19 전후로 노동시간이 늘어난 노동자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보다 5~29인 사업장, 비정규직·임시일용직보다 정규직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9)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임금 변경 경험

□ 코로나19 피해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올해 1월 이후, 작은사업장 노동자 5명 중 1명꼴(19.2%)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임금이 변경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임금 변경에는 '동의 없이 변경됨'과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변경'을 포함

[표-11] 2020년 1월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임금 변경 경험(단위: %)

구분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21.1
	5-29인	18.4
고용형태	정규직	18.9
	비정규직·임시일용직	21.0
상위 3대 업종	교육서비스업	31.1
	숙박 및 음식점업	31.0
상위 3대 직무	판매 종사자	36.1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30.0
성별	남성	21.1
	여성	17.8
연령	20대	20.1
	30~40대	19.1
	50대 이상	17.9
전체		**19.2**

- 5인 미만 사업장(21.1%)이 5~29인 사업장(18.4%)보다 2.7%p 높게 나타남
- 비정규직·임시일용직(21.0%)이 정규직(18.9%)보다 2.1%p 높게 나타남
-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임금 변경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이 높은 2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31.1%), 숙박 및 음식점업(31.0%)이며, 직무는 판매 종사자(36.1%),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30.0%) 순으로 나타남
- 남성(21.1%)이 여성(17.8%)보다 3.3%p 높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작은사업장에서 2020년 1월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임금이 변경되는 경험을 한 노동자 비율은 5~29인 사업장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임시일용직에서 더 높았으며, 업종과 직무로는 교육서비스업과 판매 종사자,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높게 조사됨

10) 코로나19와 연관된 연차휴가 사용

□ 최근 8개월(2020.2~9월) 사이에 코로나19와 연관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5명 중 1명꼴(19.3%)로 나타남

[표-12] 최근 8개월 사이 코로나19와 연관된 연차휴가 사용 경험(단위: %)

구분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16.2
	5-29인	20.7
고용형태	정규직	20.2
	비정규직·임시일용직	14.8
상위 2대 업종*	교육서비스업	36.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9.0
상위 2대 직무	관리자	25.5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5.0
성별	남성	21.8
	여성	17.4
연령	20대	14.0
	30~40대	20.8
	50대 이상	21.1
전체		**19.3**

*금융 및 보험업에서 연차휴가 사용 노동자 비율은 21.4%이지만, 사례수가 적어서 제외함

- 5~29인 사업장(20.7%)이 5인 미만 사업장(16.2%)보다 1.3배(4.5%p) 높게 나타남
- 정규직(20.2%)이 비정규직·임시일용직(14.8%)보다 1.4배(5.4%p)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와 연관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비율이 높은 상위 2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36.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9.0%)이며, 상위 2대 직무는 관리자(25.5%),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25.0%)로 나타남
- 남성(21.8%)이 여성(17.4%)보다 1.3배(4.4%p) 높고,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11) 코로나19 전후 연차휴가 일수 변화

□ 코로나 이후 2020년 연차휴가 일수는 코로나 발생 전 2019년 연차휴가 일수보다 40%가량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연차휴가 평균 일수(7.2일)는 민주노총 4월 설문조사에 나타난 2019년 연차휴가 평균 일수(12.1일)보다 4.9일이 적음

□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2020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 일수는 평균 7.2일이며, 집단별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음

[표-13] 2019~20년 연차휴가 일수 변화(단위: 일)

구분		2019년 연차휴가(A)	2020년 연차휴가(B)	격차(B-A)
사업장 규모	1-4인	11.4	4.6	-6.8
	5-29인	12.2	8.4	-3.8
고용형태	정규직	12.3	7.8	-4.5
	비정규직·임시일용직	11.4	4.5	-6.9
주요 업종	제조업	12.2	7.5	-4.7
	도소매업	11.1	7.4	-3.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2.8	8.7	-4.1
	건설업	10.3	7.6	-2.7
	교육서비스업	13.2	7.7	-5.5
	숙박·음식점업	10.5	3.0	-7.5
주요 직무	관리자	13.5	9.3	-4.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3	8.5	-4.8
	사무 종사자	12.0	9.1	-2.9
	서비스 종사자	11.2	2.8	-8.4
	판매 종사자	9.2	3.7	-5.5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0.6	5.6	-5.0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3.4	3.6	-9.8
	단순노무 종사자	11.4	4.1	-7.3
성별	남성	12.9	7.9	-5.0
	여성	11.3	6.7	-4.6
연령	20대	10.8	6.2	-4.6
	30~40대	12.5	7.9	-4.6
	50대 이상	12.0	6.0	-6.0
전체		**12.1**	**7.2**	**-4.9**

- 5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연차휴가 일수는 4.6일이며, 5~29인은 8.4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평균 7.8일)이 비정규직·임시일용직(평균 4.5일)보다 연차휴가 일수가 1.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연차휴가 일수가 가장 적은 2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0일), 도소매업(7.4일)이며, 직무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2.8일),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3.6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7.9일)이 여성(6.7일)보다 평균 1.2일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7.9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9년과 2020년 연차휴가 일수 변화 폭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음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줄어든 연차휴가 일수(-6.8일)가 5~29인 사업장(-3.8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임시일용직(-6.9일)이 정규직(-4.5일)보다 연차휴가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남
- 연차휴가 일수 감소 폭이 큰 상위 2대 업종은 숙박·음식업(-7.5일), 교육서비스업(-5.5일)으로 나타남
- 연차휴가 일수 감소 폭이 큰 상위 2대 직무는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9.8일), 서비스 종사자(-8.4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5.0일)이 여성(-4.6일)보다 감소 폭이 크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큰 폭(-6.0일)으로 감소함

3. 작은사업장 노동자 사회보장 및 노동조건 적용 실태

1) 4대 사회보험 보장 실태

□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4대 직장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89.3%로 가장 높고, 건강보험(86.0%), 국민연금(85.2%), 산재보험(82.0%) 순서로 조사됨

ㅇ 30인 미만 사업장 조사에서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 5인 미만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76.6~82.2%로, 5~9인(81.6~89.7%), 10~29인(87.3~95.3%)보다 낮게 나타남

[표-14] 작은사업장 노동자 4대 직장 사회보험 가입 실태(단위:%)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규모	1-4인		77.9	78.5	82.2	76.6
	5-29인		88.4	89.2	92.4	84.4
		5-9인	84.7	86.4	89.7	81.6
		10-29인	92.3	92.3	95.3	87.3
고용형태	정규직		90.2	90.7	93.3	86.4
	비정규직·임시일용직		59.3	61.7	68.5	59.3
가입률 하위 2대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69.0	71.8	78.9	70.4
	교육서비스업		83.6	83.6	86.9	67.2
가입률 하위 2대 직무	단순노무 종사자		54.8	54.8	64.5	67.7
	판매 종사자		55.6	58.3	69.4	58.3
성별	남성		84.7	97.3	91.0	85.2
	여성		85.6	85.0	88.0	79.6
연령	20대		76.4	77.3	82.1	73.4
	30~40대		89.0	89.5	92.6	85.3
	50대 이상		81.3	83.7	85.4	80.5
전체			**85.2**	**86.0**	**89.3**	**82.0**

ㅇ 정규직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도 매우 일관되게 나타남

- 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86.4~93.3%로 비정규직(59.3~68.5%)보다 최소

24.8%p에서 최대 30.9%p까지 차이가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하위 2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9.0~78.9%), 교육 서비스업(67.2~86.9%)으로 나타남
- 직무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하위 2대 직무는 단순노무 종사자(54.~67.7%), 판매 종사자(55.6~69.4%)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 20대의 가입률은 국민연금 76.4%, 건강보험 77.3%, 고용보험 82.1%, 산재보험 73.4% 등으로 나타남

2) 고용보험 미가입 실태와 사유

□ 작은사업장 노동자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10명 중 1명꼴(10.7%)로 나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등 취약 집단 미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5인 미만 사업장은 10명 중 거의 2명꼴(17.8%)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는 5~9인 사업장(7.6%)보다 2.3배 높게 나타남
- 비정규직·임시일용직의 고용보험 미가입률(31.5%)이 정규직(6.7%)보다 4.7배 높게 나타남
- 업종의 경우 숙박·음식점업(21.1%)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35.5%), 판매 종사자(30.6%) 등이 높게 나타남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주된 미가입 사유로는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4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저임금으로 고용보험료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됨'이 37.3%, '사업자등록이 안된 영세 사업장' 및 '신용불량 등 개인사정으로 가입이 어려움'이 각각 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15] 작은사업장 노동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태와 주된 사유

구분		미가입률 (%)	주된 미가입 사유(단위:%)				
			사업주 미신고	보험료 부담	사업자등록 안됨	신용불량 개인사정	실질 혜택 적음
사업장 규모	1-4인	17.8	34.1	51.2	4.9	4.9	4.9
	5-29인	7.6	52.4	23.8	9.5	9.5	4.8
고용형태	정규직	6.7	43.9	41.5	9.8	2.4	2.4
	비정규직·임시일용직	31.5	42.9	33.3	4.8	11.9	7.1
가입률 하위 3대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21.1	35.0	65.0	0.0	0.0	0.0
	교육서비스업	13.1	50.0	25.0	0.0	12.5	12.5
	건설업	8.6	50.0	16.7	0.0	16.7	16.7
가입률 하위 3대 직무	단순노무 종사자	35.5	37.5	25.0	12.5	0.0	25.0
	판매 종사자	30.6	22.2	66.7	0.0	11.1	0.0
	서비스 종사자	24.0	31.4	48.6	5.7	8.6	5.7
성별	남성	9.0	48.3	24.1	6.9	13.8	6.9
	여성	12.0	40.7	44.4	7.4	3.7	3.7
연령	20대	17.9	45.2	38.7	6.5	3.2	6.5
	30~40대	7.4	47.4	39.5	5.3	5.3	2.6
	50대 이상	14.6	28.6	28.6	14.3	21.4	7.1
전체		**10.7**	**43.4**	**37.3**	**7.2**	**7.2**	**4.8**

o ‘사업주 미신고’ 사유의 전체 평균(43.4%)보다 높게 나타난 집단은 5~29인 사업장(52.4%), 정규직(43.9%), 교육서비스업·건설업(50.0%), 남성(48.3%) 등임

o ‘보험료 부담’ 사유의 전체 평균(37.3%)보다 높게 나타난 집단은 5인 미만 사업장(51.2%), 숙박·음식점업(65.0%), 판매 종사자(66.7%), 서비스 종사자(48.6%), 여성(44.4%), 20대(38.7%), 30~40대(39.5%) 등임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특히 취약한 불안정 노동 집단은 실제로 저임금으로 인해 고용보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3) 실업급여 수급 실태

□ 코로나19 이후 지난 8개월(2~9월) 사이에 작은사업장 실직 경험자 10명 중 거의 7명(67.9%)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수급기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 대다수(60%)가 120일 미만이었으며, 120일 이상 180일 미만(36%), 180일 이상(4%) 순으로 나타남

[표-16] 2020년 2~9월 작은사업장 실직 경험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 실태(단위:%)

구분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71.4
	5-29인	66.0
고용형태	정규직	64.0
	비정규직·임시일용직	75.0
성별	남성	67.6
	여성	68.3
연령	20대	76.0
	30~40대	59.5
	50대 이상	75.0
전체		67.9

o 실직 경험자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 노동자 비율은 작은사업장 내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71.4%)이 5~29인 사업장(66.0%)보다, 비정규직·임시일용직(75.0%)이 정규직(64.0%)보다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의 미수급률이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41.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22.6%),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15.1%), '신청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음'(13.2%) 순으로 나타남

[표-17] 실업급여 미수급 사유별 비중(단위:%)

구분		고용보험 미가입	수급자격 미충족	자발적 실업	자발적 미신청
사업장 규모	1-4인	50.0	40.0	5.0	5.0
	5-29인	36.4	12.1	21.2	18.2
고용형태	정규직	34.4	28.1	15.6	9.4
	비정규직·임시일용직	52.4	14.3	14.3	19.0
성별	남성	28.0	20.0	20.0	24.0
	여성	53.6	25.0	10.7	3.6
전체		**41.5**	**22.6**	**15.1**	**13.2**

- 5인 미만 사업장(50.0%), 비정규직·임시일용직(52.4%), 여성(53.6%) 실직 경험자는 모두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수급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직경험자도 15.1%나 됐는데, 특히 5~29인(21.2%)에서 높게 나타남
- 한편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실직 경험자 3명 중 1명꼴(32.6%)로 자발퇴사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4) 퇴직금 제도 적용 실태

□ 퇴직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임에도,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2명 이상(21.2%)은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2010.12.1.~2012.12.31. 퇴직금 50%, 2013.1.1.~ 퇴직금 100%)

[표-18] 작은사업장 노동자 퇴직금 제도 미적용 실태(단위:%)

구분		미적용률
사업장 규모	1-4인	31.7
	5-29인	16.6
고용형태	정규직	16.2
	비정규직·임시일용직	46.9
미적용률 상위 2대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35.2
	건설업	25.9
미적용률 상위 2대 직무	판매 종사자	50.0
	단순노무 종사자	45.2
성별	남성	19.2
	여성	22.7
연령	20대	24.0
	30~40대	19.0
	50대 이상	28.5
전체		**21.2**

o 퇴직금 제도의 미적용률은 작은사업장 내에서도 기업규모 간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률(31.7%)이 5~29인 사업장(16.6%)보다 거의 2배에 가깝게 높았음

o 작은사업장 내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른 퇴직금 미적용률 격차도 매우 컸는데, 비정규직·임시일용직(46.9%)이 정규직(16.2%)보다 거의 3배 높게 나타남

o 업종별로 살펴보면, 퇴직금 제도 미적용률이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5.2%), 건설업(25.9%) 등이었는데, 전체 미적용률 평균(21.2%)보다 1.2~1.7배 높게 나타남

o 직무별로 살펴보면, 퇴직금 제도 미적용률이 높은 2대 직무는 판매 종사자(50.0%), 단순노무 종사자(45.2%) 순으로 나타남

- 판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거의 2명 중 1명꼴로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o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22.7)이 남성(19.2%)보다 퇴직금 미적용률이 1.2배가량 높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과 20대가 각각 28.5%, 24.0%로 높게 나타남

5) 육아휴직 제도 적용 실태

□ 육아휴직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노동자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거의 8명(77.2%)은 적용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노동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o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률(86.8%)이 10~29인 사업장(73.0%)보다 1.2배 높게 나타남

o 비정규직·임시일용직(87.0%)이 정규직(75.3%)보다 육아휴직 미적용률이 1.2배 높았음

o 업종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제도 미적용률이 높은 2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94.4%), 건설업(86.4%)으로 나타남

-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1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표-19] 작은사업장 노동자 육아휴직 제도 미적용 실태(단위:%)

구분		미적용률
사업장 규모	1-4인	86.8
	5-29인	73.0
고용형태	정규직	75.3
	비정규직·임시일용직	87.0
적용률 하위 2대 업종	숙박·음식점업	94.4
	건설업	86.4
적용률 하위 2대 직무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95.0
	서비스 종사자	91.5
성별	남성	77.1
	여성	77.3
연령	20대	79.5
	30~40대	75.3
	50대 이상	82.9
전체		**77.2**

- 육아휴직 제도 미적용률이 높은 2대 직무는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95.0%), 서비스 종사자(91.5%)로, 이들 직무 종사자는 사실상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의 미적용률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82.9%)이 가장 높게 나타남

6) 유급병가 제도 적용 실태

□ 유급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6명 중 1명꼴(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유급병가 제도는 현재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음

- 직장 내 유급병가 제도 운영여부에 대해 '없음'이 58.5%로 가장 높고, 해당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7%로 높게 나타남

ㅇ 유급병가 제도를 적용받는 노동자 중 대다수(70.8%)는 4주 미만이었고,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13.1%),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8.3%), 3개월 이상(7.7%) 순으로 나타남

[표-20] 작은사업장 노동자 유급병가 제도 적용 실태(단위:%)

구분		적용률
사업장 규모	1-4인	11.6
	5-29인	19.1
고용형태	정규직	16.3
	비정규직·임시일용직	19.1
적용률 하위 2대 업종	숙박·음식점업	9.2
	도소매업	10.5
적용률 하위 2대 직무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0.0
	서비스 종사자	12.0
성별	남성	22.5
	여성	12.5
연령	20대	10.9
	30~40대	17.9
	50대 이상	22.0
전체		**16.8**

ㅇ 작은사업장 조사에서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유급병가 제도 적용률은 낮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유급병가 제도 적용률(11.6%)은 10~29인 사업장(2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병가 제도 적용률은 11.6%로, 5~9인 사업장(17.5%)보다는 5.9%p, 10~29인 사업장(20.7%)보다 9.1%p 낮게 나타남

ㅇ 정규직 적용률(16.3%)이 비정규직·임시일용직(19.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유급병가 제도 적용률이 낮은 하위 2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9.2%), 도소매업(10.5%)으로 나타남

ㅇ 유급병가 제도 적용률이 낮은 하위 2대 직무는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10.0%), 서비스 종사자(12.0%)로 나타남

ㅇ 성별에 따른 유급병가 제도 적용률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이 22.5%, 여성이 12.5%로 격차는 1.8배(10.0%p)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가입률 10.9%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 유급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6명 중 1명꼴인데,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11.6%), 숙박·음식점업(9.2%), 여성(12.5%)의 적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유급병가 사용 시 임금은 '통상 또는 평균임금 100%'가 3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통상 또는 평균임금 80~100% 미만'(23.8%), '통상 또는 평균임금 60~80% 미만'(19.0%) 순으로 나타남

4.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1) 정부 대응기조 평가

(1) 단기 임시처방 중심 vs. 구조적 대안 중심

□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7명(70.0%)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단기적 임시처방 중심 대응'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장기화에 대비한 구조적 대안 중심 대응'(38.1%), '구조적 대안과 임시처방의 유기적 연계'(44.6%)에 대한 응답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대응을 '단기적 임시처방 중심'으로 평가하는 응답률은 5인 미만 사업장(72.6%), 5~9인 사업장(70.8%), 10~29인 사업장(66.9%) 등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부 대응을 '단기적 임시처방 중심'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정규직(69.3%)보다 비정규직·임시일용직(73.5%)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 임시처방 중심'으로 정부 대응을 평가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보건·사회

복지서비스업(74.7%), 숙박·음식점업(72.5%) 등이며, 직무로는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90.0%), 판매 종사자(86.1%)로 나타남

o 남성과 여성 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21] 코로나19 정부 대응 기조(단기 임시처방 vs. 구조적 대안) 평가(단위 : %)

구분		단기 임시처방 중심 대응	구조적 대안 중심 대응	임시처방과 구조적 대안 연계 대응
사업장 규모	1-4인	72.6	35.6	41.6
	5-29인	68.9	39.2	45.9
고용형태	정규직	69.3	38.4	44.3
	비정규직·임시일용직	73.5	36.4	46.3
주요 업종	제조업	69.5	37.9	43.5
	도소매업	65.1	36.0	44.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74.7	38.0	46.8
	건설업	66.7	38.3	42.0
	교육 서비스업	68.9	41.0	47.5
	숙박 및 음식점업	72.5	32.4	38.7
	운수 및 창고업	59.3	44.2	48.7
주요 직무	관리자	70.9	40.0	43.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4.5	33.3	43.1
	사무 종사자	68.5	39.8	46.7
	서비스 종사자	69.5	35.5	41.0
	판매 종사자	86.1	41.7	38.9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62.5	43.8	50.0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90.0	35.0	50.0
	단순노무 종사자	64.5	19.4	35.5
성별	남성	70.1	37.0	43.3
	여성	69.9	38.9	45.6
연령	20대	69.4	35.4	45.0
	30~40대	70.2	39.5	44.3
	50대 이상	69.9	35.8	45.5
전체		**70.0**	**38.1**	**44.6**

(2) 노동자 지원 중심 vs. 기업 지원 중심

□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55.5%)은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노동자 지원과 기업 지원 사이에서 균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기업 자금 지원 중심'이라고 평가하는 응답률도 51.9%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22] 코로나19 정부 대응 기조(기업 지원 vs. 노동자 지원) 평가(단위 : %)

구분		기업지원과 노동자지원 불균형 대응	기업지원 중심 대응
사업장 규모	1-4인	60.4	52.8
	5-29인	53.4	51.5
고용형태	정규직	55.1	51.7
	비정규직·임시일용직	57.4	53.1
주요 업종	제조업	55.4	50.8
	도소매업	54.7	51.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50.6	54.4
	건설업	55.6	46.9
	교육 서비스업	52.5	60.7
	숙박 및 음식점업	62.0	47.9
	운수 및 창고업	50.4	49.6
주요 직무	관리자	57.3	44.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8.8	51.0
	사무 종사자	51.5	54.0
	서비스 종사자	66.0	51.0
	판매 종사자	52.8	50.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56.2	56.3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45.0	50.0
	단순노무 종사자	51.6	48.4
성별	남성	55.3	52.3
	여성	55.6	51.6
연령	20대	58.1	51.5
	30~40대	54.0	52.2
	50대 이상	58.5	51.2
전체		**55.5**	**51.9**

- 정부 대응을 '기업지원과 노동자지원 사이에서 균형적이지 않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5인 미만 사업장(60.4%)에서 5~29인 사업장(53.4%)보다 높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부 대응이 기업지원과 노동자지원 사이에 불균형하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정규직(55.1%)보다 비정규직·임시일용직(57.4%)에서 높게 나타남
- '기업지원과 노동자지원 사이의 불균형 대응'으로 정부 대책을 평가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숙박·음식점업(62.0%)이고, 직무로는 서비스 종사자(58.8%)가 높게 나타남
- 남성과 여성 간 응답률 차이는 거의 없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3) 재직자 고용유지 중심 vs. 실직자 소득지원 중심

□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56.4%)은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실직자 소득지원 중심'이라고 평가했지만, '재직자 고용유지 중심' 대응으로 평가한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8.5%로 나타남

[표-23] 코로나19 정부 대응 기조(재직자고용유지 vs. 실직자소득지원) 평가(단위 : %)

구분		재직자 고용유지 중심	실직자 소득지원 중심
사업장 규모	1-4인	43.6	54.5
	5-29인	50.6	57.2
고용형태	정규직	49.0	57.4
	비정규직·임시일용직	45.7	51.2
주요 업종	제조업	51.4	57.1
	도소매업	45.3	58.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50.6	60.8
	건설업	50.6	58.0
	교육 서비스업	50.8	50.8
	숙박 및 음식점업	39.4	48.6
	운수 및 창고업	53.1	57.5
주요 직무	관리자	54.5	6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1	52.9
	사무 종사자	50.0	59.8
	서비스 종사자	43.0	50.5
	판매 종사자	44.4	44.4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56.3	46.9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60.0	65.0
	단순노무 종사자	32.3	45.2
성별	남성	50.7	55.1
	여성	46.8	57.4
연령	20대	42.8	59.0
	30~40대	49.8	57.4
	50대 이상	52.0	46.3
전체		**48.5**	**56.4**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반 이하(43.6%)가 '재직자 고용유지 중심' 대응에 응답했는데, 이는 5~29인 사업장(50.6%)보다 7.0%p 낮음
- 정부 대응이 '재직자 고용유지 중심'이라고 평가한 응답률은 정규직(49.0%)보다 비정규직(45.7%)에서 더 낮게 나타남
- 정부 대응을 '재직자 고용유지 중심'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

점업으로 39.4%이며, 직무로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32.3%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간에는 각각 50.7%, 46.8%로 남성보다 여성이 '재직자 고용유지 중심' 대응에 대해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2.8%로 가장 낮게 나타남

2)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 평가

(1)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 인지 여부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대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7~8명 이상(72.9~83.5%)은 해당 대책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대해 알고 있는 노동자 비율은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27.1%),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26.6%),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22.5%) 등으로 나타남
-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대한 '잘 모름' 비율은 전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72.9~84.8%)가 5~29인 사업장 노동자(71.7~81.5%)보다 높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대한 '잘 모름' 비율은 비정규직·임시일용직(77.8~85.2%)이 정규직(71.4~82.3%)보다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대한 '잘 모름'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업(76.8~90.1%)과 건설업(77.8~90.1%)이며, 직무로는 판매 종사자(80.6~91.7%)와 서비스 종사자(79.0~88.0%)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70.4~79.9%)과 여성(71.7~84.0%) 간 '잘 모름' 비율은 전반적으로 여성이 높고, 연령대별로 20대(74.7~86.9%)의 '잘 모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24] 주요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대한 '잘 모름' 비율(단위 : %)

구분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협약 인건비 지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사업장 규모	1-4인	72.9	77.2	80.5	84.8	83.8
	5-29인	72.9	71.7	76.2	80.2	81.5
고용 형태	정규직	71.4	72.6	76.5	80.9	82.3
	비정규직·임시일용직	80.9	77.8	82.7	85.2	81.5
주요 업종	제조업	72.9	69.5	75.7	80.2	82.5
	도소매업	67.4	69.8	76.7	83.7	79.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77.2	74.7	77.2	83.5	81.0
	건설업	77.8	77.8	82.7	88.9	90.1
	교육 서비스업	67.2	63.9	67.2	73.8	73.8
	숙박 및 음식점업	76.8	85.2	84.5	84.5	90.1
	운수 및 창고업	69.0	69.9	77.0	79.6	82.3
주요 직무	관리자	65.5	58.2	61.8	74.5	72.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6.7	64.7	68.6	74.5	74.5
	사무 종사자	71.0	73.7	79.0	82.1	82.1
	서비스 종사자	79.0	82.0	83.5	86.5	88.0
	판매 종사자	86.1	80.6	91.7	86.1	91.7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65.6	68.7	68.7	71.9	81.2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90.0	75.0	75.0	80.0	90.0
	단순노무 종사자	83.9	77.4	77.4	83.9	77.4
성별	남성	74.5	70.4	76.4	78.7	79.9
	여성	71.7	75.7	78.3	83.8	84.0
연령	20대	74.7	77.7	81.2	86.9	85.2
	30~40대	71.6	72.4	77.0	79.8	81.2
	50대 이상	76.4	70.7	73.2	81.3	82.1
전체		**72.9**	**73.4**	**77.5**	**81.6**	**82.2**

(2)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 혜택 경험

□ 코로나19 실업위기 대응을 위한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대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대략 3~8명(3.5~8.3%)만이 실제 혜택을 경험했으며, 나머지 대다수는 대책 자체를 잘 모르거나 혜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대책별 혜택 경험 비율은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8.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7.3%),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책에 대한 인지 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이 가장 높았지만, 실제 혜택 경험은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6-1>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 혜택 여부

(3)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8명(8.3%)만이 혜택을 입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고용유지지원금 자체를 잘 모르거나 혜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6.9%)보다 5~29인 사업장(8.9%)의 혜택 경험이 높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8.0%)보다 비정규직·임시일용직(9.9%)의 혜택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경험 비율이 높은 곳은 교육 서비스업(11.5%), 운수·창고업(10.6%)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의 경우 관리자(16.4%),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15.0%)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10.2%)이 여성(6.9%)보다 약 1.5배 혜택 경험 비율이 높음
- 연령대별로는 40대의 혜택 경험 비율이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26] 작은사업장 노동자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경험(단위:%)

구분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6.9
	5-29인	8.9
고용형태	정규직	8.0
	비정규직·임시일용직	9.9
상위 2대 업종	교육서비스업	11.5
	운수 및 창고업	10.6
상위 2대 직무	관리자	16.4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5.0
성별	남성	10.2
	여성	6.9
연령	20대	7.9
	30~40대	9.0
	50대 이상	5.7
전체		**8.3**

(4)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은 애초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대책이었는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책인데,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7명(7.3%)만이 혜택을 입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자체를 잘 모르거나 혜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7.6%)보다 5~29인 사업장(7.2%)의 혜택 경험이 미세하게나마 낮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7.8%)이 비정규직·임시일용직(4.9%)보다 혜택 경험이 1.6배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혜택 경험 비율이 높은 곳은 도소매업(11.6%), 운수 및 창고업(11.5%)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의 경우 관리자(13.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9.8%) 순으로 나타남
- 남성(7.2%)과 여성(7.4%)의 혜택 경험 비율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40대의 혜택 경험 비율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27] 작은사업장 노동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혜택 경험(단위:%)

구분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7.6
	5-29인	7.2
고용형태	정규직	7.8
	비정규직·임시일용직	4.9
상위 2대 업종	도소매업	11.6
	운수 및 창고업	11.5
상위 2대 직무	관리자	13.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8
성별	남성	7.2
	여성	7.4
연령	20대	7.9
	30~40대	7.3
	50대 이상	6.5
전체		**7.3**

(5) 무급휴직 신속지원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월 50만원 씩, 최장 3개월 지원하는 대책인데,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3~4명(3.6%)만이 실제 혜택을 입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자체를 잘 모르거나 혜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3.0%)보다 5~29인 사업장(3.9%)의 혜택 경험이 미세하게나마 높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3.6%)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3.7%)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혜택 경험은 비슷하게 나타남
- 업종별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혜택 경험 비율이 높은 곳은 교육서비스업(4.9%), 제조업(4.5%)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9.7%), 관리자(9.1%)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5.1%)의 혜택 경험 비율이 여성(2.5%)보다 2배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혜택 경험 비율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28] 작은사업장 노동자 무급휴직 신속지원 혜택 경험(단위:%)

구분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3.0
	5-29인	3.9
고용형태	정규직	3.6
	비정규직·임시일용직	3.7
상위 2대 업종	교육서비스업	4.9
	제조업	4.5
상위 2대 직무	단순노무 종사자	9.7
	관리자	9.1
성별	남성	5.1
	여성	2.5
연령	20대	4.4
	30~40대	3.4
	50대 이상	3.3
전체		**3.6**

(6)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4명(4.0%)만이 실제 혜택을 입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해당 사업 자체를 잘 모르거나 혜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5~29인 사업장 노동자의 혜택 경험(4.7%)이 5인 미만 사업장(2.3%)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3.9%)보다 비정규직·임시일용직(4.3%)의 혜택 경험이 미세하게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사업의 혜택 경험 비율이 높은 곳은 교육서비스업(6.6%), 운수 및 창고업(6.2%)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의 경우 판매 종사자(8.3%), 관리자(8.2%)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5.3%)의 혜택 경험 비율이 여성(3.0%)보다 약 1.8배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40대의 혜택 경험 비율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29] 작은사업장 노동자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혜택 경험(단위:%)

구분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2.3
	5-29인	4.7
고용형태	정규직	3.9
	비정규직·임시일용직	4.3
상위 2대 업종	교육서비스업	6.6
	운수 및 창고업	6.2
상위 2대 직무	판매 종사자	8.3
	관리자	8.2
성별	남성	5.3
	여성	3.0
연령	20대	3.1
	30~40대	4.5
	50대 이상	3.3
전체		**4.0**

3)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 평가

(1)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 인지 여부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7~8명 이상(69.8~86.0%)은 해당 대책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보다는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 비율이 미세하게 높게 나타나지만, 양 대책의 ‘잘 모름’ 비율은 비슷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 중 ‘잘 모름’ 비율이 가장 낮은 대책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69.8%)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71.1%), ‘코로나19 격리 생계비 지원’(71.8%),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 중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저소득층·특고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29인 사업장보다 ‘잘 모름’ 비율이 낮았고, 그 이외 대책은 5~29인 사업장이 높게 나타남

[표-30] 주요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에 대한 '잘 모름' 비율(단위 : %)

구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가족돌봄휴가지원	코로나19격리 생계비 지원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특고 구직촉진수당
사업장 규모	1-4인	68.6	73.3	71.9	78.9	77.2
	5-29인	70.3	70.2	71.7	73.0	77.6
고용 형태	정규직	69.7	70.8	71.6	74.2	78.2
	비정규직·임시일용직	70.4	72.8	72.8	77.8	74.1
주요 업종	제조업	72.3	75.1	74.6	72.9	82.5
	도소매업	73.3	62.8	69.8	74.4	70.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72.2	69.6	79.7	81.0	78.5
	건설업	77.8	71.6	81.5	86.4	84.0
	교육 서비스업	52.5	60.7	59.0	55.7	70.5
	숙박 및 음식점업	71.1	76.1	69.7	78.9	72.5
	운수 및 창고업	65.5	70.8	66.4	69.9	73.5
주요 직무	관리자	60.0	65.5	70.9	60.0	73.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0.6	60.8	68.6	72.5	74.5
	사무 종사자	70.6	71.5	72.9	76.9	80.6
	서비스 종사자	69.0	72.0	67.5	75.0	73.0
	판매 종사자	80.6	80.6	77.8	86.1	69.4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75.0	75.0	87.5	78.1	84.4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80.0	85.0	70.0	70.0	85.0
	단순노무 종사자	71.0	71.0	67.7	80.6	71.0
성별	남성	71.5	74.3	72.7	73.4	78.2
	여성	68.5	68.7	71.1	75.9	76.9
연령	20대	71.2	70.3	72.5	77.7	74.7
	30~40대	69.3	70.7	71.1	74.7	78.7
	50대 이상	69.9	74.8	74.0	69.9	76.4
전체		**69.8**	**71.1**	**71.8**	**74.8**	**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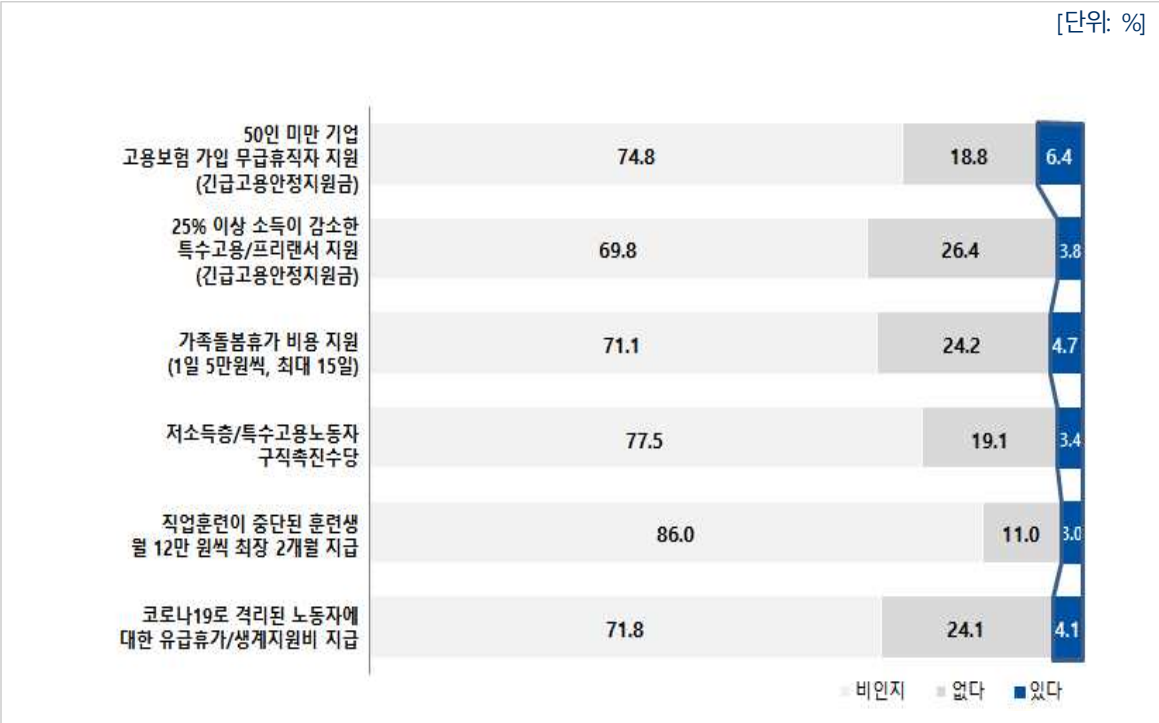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특고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면, '잘 모름' 비율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임시일용직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대한 '잘 모름' 비율이 높은 업종은 건설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며, 직무로는 판매 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등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간 '잘 모름' 비율은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2)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 혜택 경험

□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대략 4~6명(4.1~6.4%)만이 혜택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는 대책 자체를 잘 모르거나 혜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대책별 혜택 경험 비율은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6.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4.7%), ‘코로나19 격리 생계비 지원’(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책에 대한 인지 여부는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장 높았지만, 실제 혜택 경험은 사업장 기반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소득지원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7-1> 실직자 대책 혜택 여부



(3) 무급휴직자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무급휴직자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무급휴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대책인데,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6명(6.4%)만이 실제 혜택을 입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대책 자제를 모르거나 혜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32] 작은사업장 노동자 ‘무급휴직자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 경험(단위:%)

구분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5.0
	5-29인	7.0
고용형태	정규직	6.1
	비정규직·임시일용직	8.0
상위 2대 업종	교육서비스업	21.3
	운수 및 창고업	8.0
상위 2대 직무	관리자	15.5
	판매 종사자	11.1
성별	남성	6.5
	여성	6.3
연령	20대	9.2
	30~40대	6.0
	50대 이상	3.3
전체		**6.4**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5.0%)보다 5~29인 사업장(7.0%)의 혜택 경험이 높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6.1%)보다 비정규직·임시일용직(8.0%)의 혜택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혜택 경험 비율이 높은 곳은 교육 서비스업(21.3%), 운수·창고업(8.0%)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의 경우 관리자(15.5%), 판매 종사자(11.1%)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혜택 경험이 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가족돌봄휴가 지원

□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일 5만 원 씩, 1년 최대 15일까지 지원하는 대책인데,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5명(4.7%)만이 실제 혜택을 입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대책 자체를 모르거나 혜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33] 작은사업장 노동자 ‘가족돌봄휴가 지원’ 혜택 경험(단위:%)

구분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5.0
	5-29인	4.6
고용형태	정규직	4.8
	비정규직·임시일용직	4.3
상위 2대 업종	교육서비스업	9.8
	도소매업	5.8
상위 2대 직무	관리자	1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8
성별	남성	4.9
	여성	4.6
연령	20대	4.8
	30~40대	4.9
	50대 이상	3.3
전체		**4.7**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5.0%)가 5~29인 사업장(4.6%)보다 혜택 경험이 높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4.8%)이 비정규직·임시일용직(4.3%)보다 혜택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가족돌봄휴가 지원’ 혜택 경험 비율이 높은 곳은 교육 서비스업(9.8%)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의 경우 관리자(1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7.8%)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30대의 혜택 경험이 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저소득층·특고 구직촉진수당

□ 저소득층·특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업에 대해,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3명(3.4%)만이 실제 혜택을 입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해당 사업 자체를 잘 모르거나 혜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34] 작은사업장 노동자 '저소득층·특고 구직촉진수당' 혜택 경험(단위:%)

구분		비율
사업장 규모	1-4인	4.0
	5-29인	3.2
고용형태	정규직	3.3
	비정규직·임시일용직	3.7
상위 2대 업종	교육서비스업	6.6
	도소매업	5.8
상위 2대 직무	관리자	7.3
	단순노무 종사자	6.5
성별	남성	4.9
	여성	2.3
연령	20대	4.8
	30~40대	2.9
	50대 이상	3.3
전체		**3.4**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혜택 경험(4.0%)이 5~29인 사업장(3.2%)보다 미세하게 높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3.3%)보다 비정규직·임시일용직(3.7%)의 혜택 경험이 미세하게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저소득층·특고 구직촉진수당 사업의 혜택 경험 비율이 높은 곳은 교육서비스업(6.6%), 도소매업(5.8%)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의 경우 관리자(7.3%), 단순노무 종사자(6.5%)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4.9%)의 혜택 경험 비율이 여성(2.3%)보다 약 2.1배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혜택 경험 비율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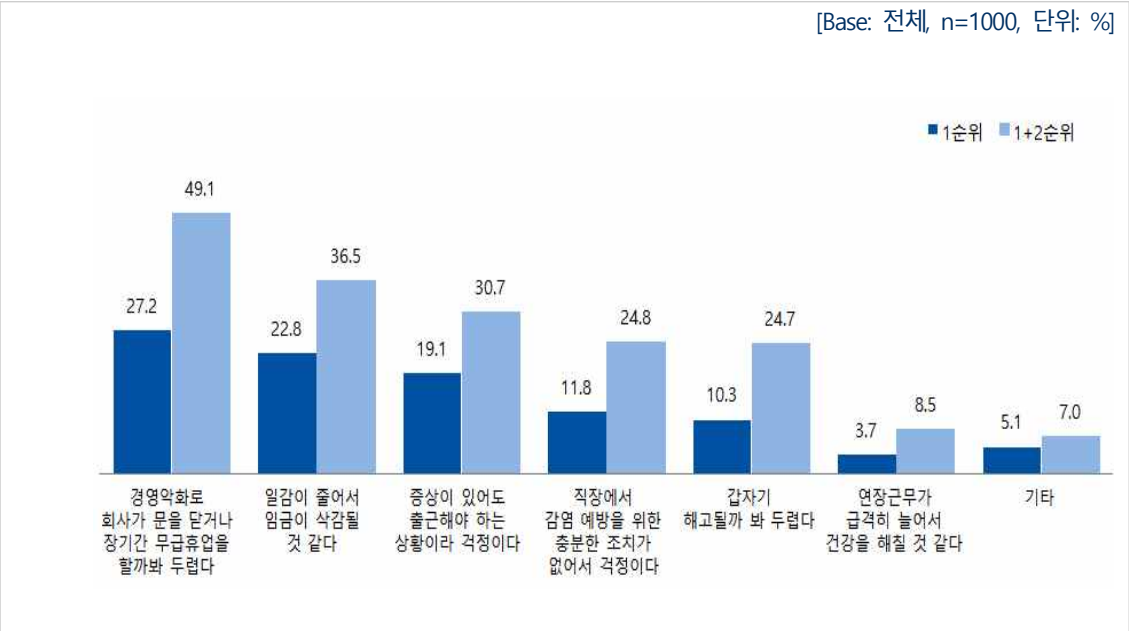
5.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생각하는 코로나19 극복 대안

1)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

□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경영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장기간 무급휴업'(2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감이 줄어 임금삭감'(22.8%), '증상이 있어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19.1%) 등의 순으로 나타남(1순위 기준)

- 가장 걱정되는 부분 1순위로 회사폐업·장기무급휴업(27.2%)과 해고(10.3%)를 선택한 노동자 비율을 합하면 37.5%로, 이는 작은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 이상은 고용불안을 미래에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20>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우선순위)



□ 민주노총이 지난 4월 2일 ~ 8일 사이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발견됨

-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우려가 1순위 기준으로 4.9%p나 늘어남

o ‘증상 있어도 출근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4.8%p 늘어남

o ‘직장 감염예방 조치의 불충분’에 대한 우려는 4.2%p 줄어듦

o ‘회사폐업 또는 장기 무급휴업’에 대한 우려는 2.3%p 줄어듦

- 하지만, ‘회사폐업·장기무급휴업’과 ‘해고’를 합한 ‘고용불안’에 대한 1순위 선택 비율은 4월 조사(34.9%)보다 10월 조사(37.5%)에서 2.6%p 증가

[표-36]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 4월-10월 조사 비교(단위: %, %p)

항목	4월 조사(A)		10월 조사(B)		격차(B - A)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회사폐업 또는 장기 무급휴업(①)	29.5	46.8	27.2	49.1	-2.3	2.3
일감 줄어, 임금 삭감	22.4	36.5	22.8	36.5	0.4	0.0
증상 있어도 출근하는 상황	14.3	21.1	19.1	30.7	4.8	9.6
직장 감염예방 조치의 불충분	16.0	22.9	11.8	24.8	-4.2	1.9
갑작스러운 해고(②)	5.4	13.0	10.3	24.7	4.9	11.7
연장근무로 인한 건강 약화	2.2	4.5	3.7	8.5	1.5	4.0
고용불안(①+②)	34.9		37.5		2.6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시사

2) ‘해고 억제·재직자 고용유지 대책’ 우선 순위

□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해고를 억제하고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이 2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고용유지 의무 연계 강화’(22.6%),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특례기간과 지원 기간 연장’(15.3%), ‘정부지원기업에 대해 한시적 해고금지’(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1순위 기준)

o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관련된 항목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은 ‘제도 개선’(27.0%)과 ‘특례기간과 지원기간 연장’(15.3%)을 합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2.3%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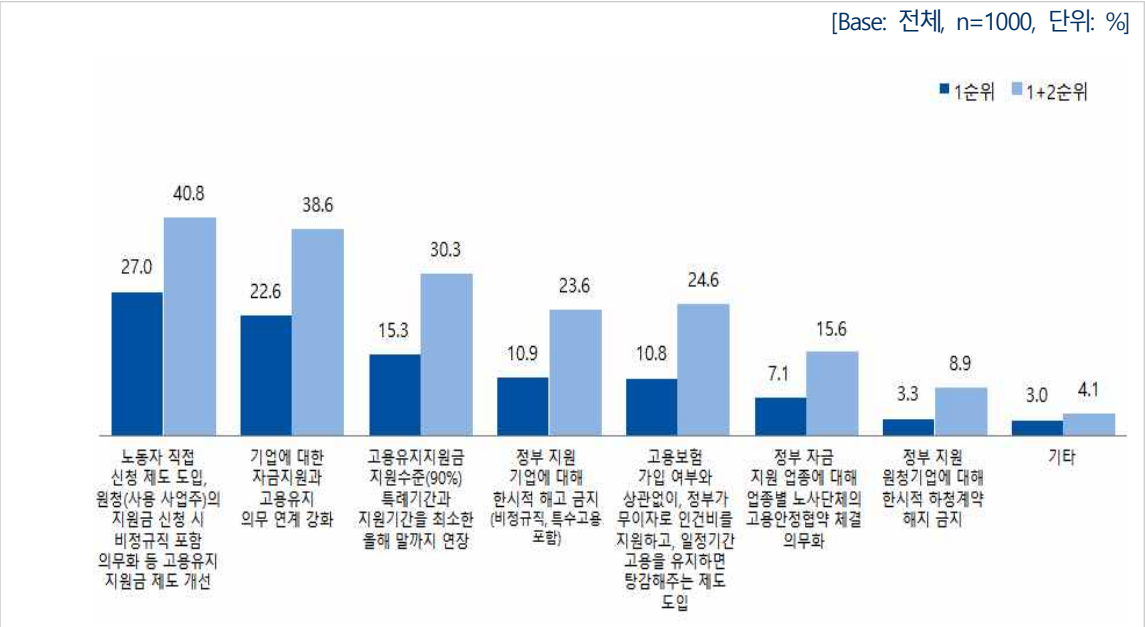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지원금 신청을 회피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

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용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 시 비정규직 포함 의무화, 노동자 직접 신청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

o ‘기업자금지원과 고용유지 의무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도 1순위 기준으로 22.6%, 1순위와 2순위까지 합하면 38.6%로 상당히 높았음

- 기업지원과 고용유지 의무 연계 방안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본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문재인 정부도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실제 이행되지는 않고 있음

<그림 21>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해고를 억제하고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대책(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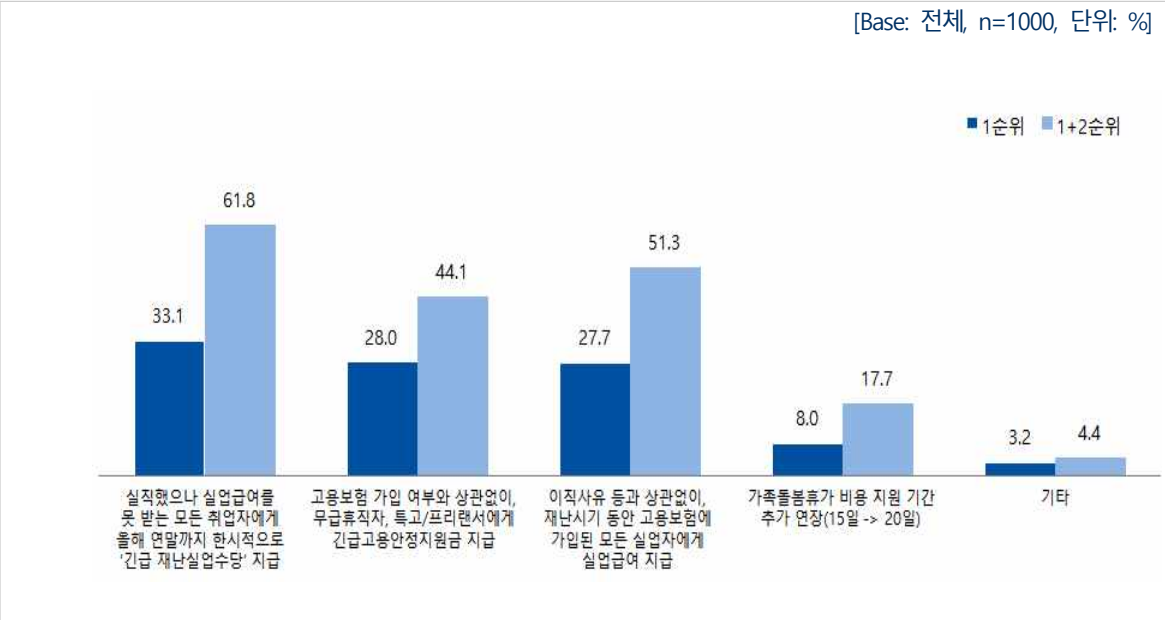


3) 실업자 또는 소득 급감 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 우선 순위

□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실업자 또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 ‘한시적 긴급 재난실업수당 지급’이 3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28.0%), '이직사유 등에 상관없이 실업급여 지급'(27.7%) 등의 순으로 나타남(1순위 기준)

▌<그림 22>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실업자 또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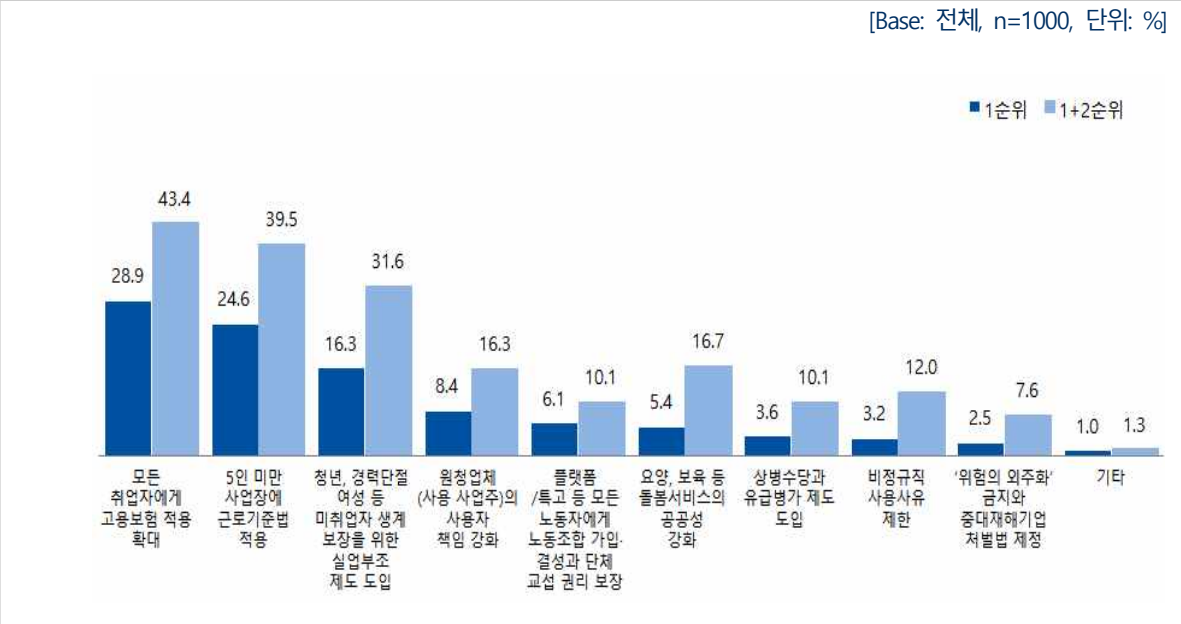
-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집중된 계층은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지만, 고용보험 가입(무급휴직자) 또는 미가입(특고·프리랜서) 요건 등으로 인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대안으로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못 받는 모든 취업자에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재난실업수당 지급'을 1순위로 선택함
- 한편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긴급고용안정금 지급'도 1순위 응답률이 28.0%에 달해, 현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웅변하고 있음
- 실업급여는 가장 기초적인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이지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이직 사유 등

과 상관없이, 재난시기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이 1순위 선택으로는 27.7%이고 2순위 응답까지 합하면 51.3%에 달해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음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람직한 노동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람직한 노동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 사회가 갖춰야 할 정책 우선순위로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28.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24.6%), '실업부조 제도 도입'(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1순위 기준)

▌<그림 2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람직한 노동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 사회가 갖춰야 할 정책(우선순위)



○ 가장 많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선순위 개혁 과제로 선택한 것은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인데, 이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의 법적·실질적 적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경제·고용위기에 대비하는 가

장 기본적인 제도적 토대는 고용보험 확대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작은사업장 노동자 4명 중 1명(24.6%)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스트 코로나시대 우선순위 과제로 선택했는데, 이는 기업규모를 이유로 각종 권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더 이상 유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
-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도입되었지만,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청년 등을 배제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 16.3%는 '제대로 된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1순위 과제로 응답함

6. 요약 및 시사점

□ 코로나19 전후 '30인 미만 작은사업장'(이하 작은사업장) 노동자 생활실태 변화,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사회보장 및 노동조건 적용 실태,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생각하는 코로나19 극복 대안 등에 대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코로나19 전후 작은사업장 노동자 생활실태 변화

- 최근 8개월(2020.2~9월) 사이에, 작은사업장 노동자 약 8명 중 1명꼴(13.4%)로 직장 내 '코로나 실직'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약 2명(18.4%)은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 대비 임금이 삭감됨
- 코로나19를 전후로 임금감소를 경험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월평균 감소액은 거의 40만 원에 육박하는 39만 4천 원(19.0%)
- 최근 8개월(2020.2~9월) 사이에,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2~3명(25.5%)은 직장 내 일시휴직을 경험
-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무급휴직·휴업을 경험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대략 6명 중 1명꼴(16.1%)
-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과 비교해 직장 내 업무강도가 높아진 경험을 한 작은사업

장 노동자는 대략 6명 중 1명꼴(17.1%)

-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과 비교해,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변화가 없었다'(75.0%), '줄었다'(15.9%), '늘었다'(9.1%)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20년 1월 이후, 작은사업장 노동자 5명 중 1명(19.2%)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임금이 불이익하게 변경됨
- 최근 8개월(2020.2~9월) 사이에 코로나19와 연관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5명 중 1명꼴(19.3%)
- 코로나 이후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연차휴가 일수(2020년)는 코로나 발생 전(2019년) 연차휴가 일수보다 40%가량(4.9일) 큰 폭으로 줄어듦

□ 작은사업장 노동자 사회보장 및 노동조건 적용 실태

-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4대 직장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89.3%로 가장 높고, 건강보험(86.0%), 국민연금(85.2%), 산재보험(82.0%) 순서로 나타남
- 작은사업장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장(17.8%)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31.5%) 등 취약 집단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지난 8개월(2~9월) 사이에 작은사업장 실직 경험자 10명 중 약 7명(67.9%)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음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41.5%)이 가장 높음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약 2명(21.2%)은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음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약 8명(77.2%)은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지 없음
- 유급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6명 중 1명꼴(16.8%)에 불과함

□ 작은사업장 노동자 코로나19 대응 평가

o 정부 대응 기조 평가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7명(70.0%)은 코로나19 대응을 '단기적 임시처방 중심'으로 평가
-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55.5%)은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노동자 지원과 기업 지원 사이에서 균형적이지 않다고 평가
-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재직자 고용유지 중심'이라고 평가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침(48.5%)

o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 평가

-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대해,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약 7~8명(72.9~83.5%)은 해당 대책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대해,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대략 3~8명(3.5~8.3%)만이 실제 혜택을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8명(8.3%)만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7명(7.3%)만이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3~4명(3.6%)만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4명(4.0%)만이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혜택을 경험

o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 평가

-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7~8명 이상(69.8~86.0%)은 해당 대책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대략 4~6명(4.1~

6.4%)만이 혜택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6명(6.4%)만이 '무급휴직자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5명(4.7%)만이 '가족돌봄휴가 지원' 혜택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약 3명(3.4%)만이 '저소득층·특고 구직촉진수당' 혜택 경험

□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생각하는 코로나19 극복 대안

ㅇ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약 4명(37.5%)은 회사폐업·장기무급휴업(27.2%), 해고(10.3%) 등 고용불안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42.3%)은 해고 억제와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과 특례기간·지원기간 연장을 우선순위로 생각

ㅇ 작은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대안으로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못 받는 모든 취업자에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재난실업수당 지급'을 우선순위로 생각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람직한 노동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28.9%)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24.6%)을 우선순위로 생각

□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대책에서는 계속해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 현장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부 대응 기조와 세부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ㅇ 대다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평가했듯이 정부는 '단기적 임시처방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제도 개선과 신속한 구조적 개혁 대안 마련 필요

o 절반 이상(55.5%)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부 대응을 노동자와 기업 지원 사이에 균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기업지원' 중심 대응에서 시급히 벗어나 '재직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소득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지난 8월 말~9월 초 기준, 기업지원 실적(48조 7,429억 원)은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1조 3,900억 원)의 35배, 주요 실직·소득감소 지원대책(2조 1,703억 원)의 22배에 달함[2)]

o 특히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약 4명은 '고용불안'을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응답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사후적인 실업자 지원보다 재직자 고용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 관련 대책을 획기적 확대·강화해야 함

o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으로는 작은사업장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가 시사하듯이, 노동자 직접신청 제도 도입·원청 지원금 신청 시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 의무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과 특례조치기간·지원기간 연장 등 임시조치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자금지원-고용유지의무 연계 정책을 확대·강화해야 함

o 현행 대표적인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미가입 요건, 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못 받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실업수당' 도입이 절실함

- '긴급 재난실업수당'은 가장 많은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최우선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으로 꼽은 제도임

o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대략 7~8명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코로나19 대책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실제 적용을 위한 첫발로써 노동조합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장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o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꼽은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대

2) 이창근(2020), 「코로나19 대응 실적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 위기 대응 성격」, 『이슈페이퍼』 2020-16호,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로 된 실업부조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특고 등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한국 사회 구조 개혁 과제임